

456/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과속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라”

민주노총 | 승인 2008.03.17 18:55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계급투표 운동’, ‘평생당원’까지

민주노총 “이명박 정부 ‘과속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계급투표 운동’, ‘평생당원’까지

이명박 정부의 과속질주가 우려되고 있다. 초기 집권 인선부터 ‘부자’ 코드라는 인상이 역력하다. 평균 39억 원 재산에 집은 적게는 2채에서 많게는 5채도 소유하고 있다.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S라인’(서울),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등의 속어도 난무한다.

엮힌 데 덮친 격일까. 최근에는 “‘남편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온다. 라면(100원), 닭고기(35%), 논술학원비(33%), 자장면(29%) 인상 등 물가도 비상이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청년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영어몰입’에다 유치원까지 사교육 영어 광풍을 일으킬 판이다. 일명 ‘9사1생’(90%는 죽고 10%만 사는)인 셈이다.

이쯤 되면 민생 신호등을 무시하는 ‘과속질주’인 셈이다. 이에 브레이크의 주체로 민주노총이 대두되고 있다. 80만 명을 거느린 대규모 조직, ‘한다면 한다’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다시 모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이 소속출신 총선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차 평생당원 100명 가입과 이와 함께 마련된 당비 1억 원을 민주노동당에 전달했다. 대대적인 민주노총 집단 ‘평생당원’ 가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후에도 1천 명이 가입할 것을 시사했다.

또 총선 전략지역으로 △울산(95개노조 45,377명의 조합원) △창원(113개 20,450명의 조합원) △거제를 비롯해 광주(109개 노조 26,230명의 조합원) △경기화성(75개 노조 26,717명의 조합원) 등 모두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선대본 설치 및 교육과 현장순회 등의 계획과 실천을 집중 지원할 셈이다. 이들 5개 전략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역대 노동자후보 지지율 20% 이상과 현역 의원 출마지역이기도 하다.

집단입당운동도 주요한 과제다. 지난 4일 전북에서 256명의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집단입당한 데 이어 11일 거제에서 150명이 입당한 바 있다. 18일 300명의 창원지역 조합원 집단입당도 예정돼 있다. 총선시기에는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세액공제와 2,000원 정치기금모금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을 맞아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27일 법정 선거운동 시작부터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 구호 등이 정문, 후문 등에 부착된다. 모든 사업장 아침 조합원 선전전은 물론 부서별, 대의원 선거구별 조회와 간담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4월 2~7일에는 연고자 작성하기, 가족에게 편지보내기, 저녁에 가족회의 등 일명 ‘계급투표’ 전략이 뒤따르게 된다.

선거일 전날인 8일에는 ‘진보야당’ 민주노동당 승리 기원 릴레이 촛불 행사도 마련된다. 무엇보다 오는 24일 88체육관에서 개최될 ‘민주노총 총선선대본 출범 및 필승결의대회’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 및 간부 1~2천명의 대규모 군중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이른바 ‘빨간등 운동’이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을 기세다. 강상철 기자